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자립화 목표 소부장 21개 기업에 1200억 투입

산업부, 5500억 민간투자 견인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200억

산업통상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기업 21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 1211억 원(국비 700억 원 포함)이 투입되면서 55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견인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18일 오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고,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 21개 기업을 투자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62개 투자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추렸다. 지원대상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약 절차를 마친 뒤 즉시 사업비를 지급받게 된다.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해 30~50%(국비+지방비)를 보조하는 구조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입지·설비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는 200억원이다. 2025~2027년 3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했으며, 투자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와 정산이 이뤄진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지원금은 국내 생산·연구시설 확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등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로봇·방산 분야를 추가해 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 기준 국비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달 중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

/aT

122개 양조장 참여… ‘우리술’ 우수성 알려

농식품부·aT ‘우리술대축제’ 성황
3일간 2만5884명 방문 최대 규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8일 aT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우리술의 우수성과 맛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시음 체험과 다양한 소비자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2개 양조장이 참여했고 총 2만5884명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규

모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만5000명 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또 업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돼 복합 문화 축제로 꾸러졌다. ▲2025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 ▲막걸리·와인 만들기 체험 ▲양조장 창업 컨설팅 ▲우리술 경매소·코미디 토크쇼 ▲바이어 상담회 등이다.

현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평소 우리술 하면 막걸리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품미가 깊은 술이 많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며 “오늘 시음해본 술 중 가장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연말 송년모임에 들고 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일자리 증가폭 또 둔화… 역대 두번째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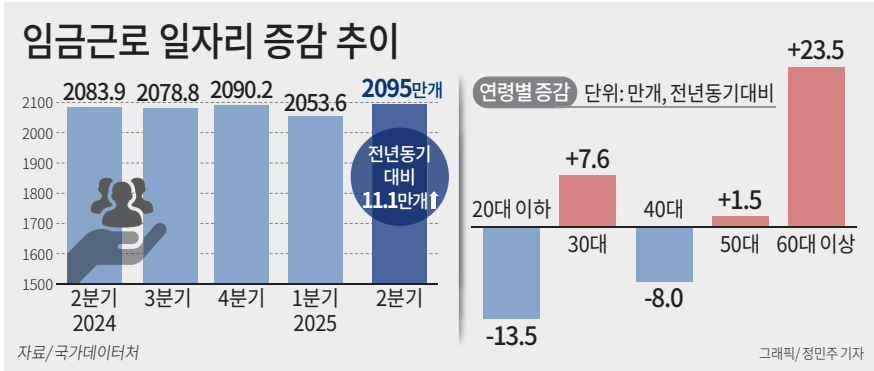
데이터처,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건설업 부진·청년층 고용감소 원인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분기 대비 11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속되는 건설업 부진과 20대 이하 청년층 고용 감소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만1000개(0.5%) 증가했다. 증가폭이 지난 201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2번째로 낮다.

지난 1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보다 1만5000개 증가하는 것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엔 전분기보다 일자리가 늘었으나, 추세적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 둔화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분기 수치는 지난 3~4년간 이어진 증가 폭 둔화 흐름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0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이어갔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함께 졸업 후 취업 유예, 고용시장 진입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0대 일자리도 8만개 줄어들며 연령대 중 2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23만5000개 증가했고, 뒤를 이어 30대(7만6000개), 50대(1만5000개)도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6만6000개 감소했고 여성 일자리는 17만7000개 증가했다.

남성은 건설업(-12만1000개), 정보통신업(-9000개), 제조업(-6000개) 등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1만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2만2000개), 전문·과학·기술(1만4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남성은 건설업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기차 충전기 지자체 미신고시 과태료

기후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의결

‘지자체 앞 신고’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이 확인될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의 책임보

험 가입과 지자체 신고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가입 시기 등이 규정됐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가운데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 시·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한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또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는 방탈출 카페·키즈카페·관화카페업도 이번 포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기업 절반, 희망하는 인재상 ‘전문성’

고용부, 2025 기업 채용동향조사

국내 매출 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때 ‘전문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의 핵심 요건으로는 전공과 인턴십 등 일경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396개 기업 응답)과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재직자 3093명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기업들은 ‘희망하는 인재상’을 묻는 질문에서 52.8%는 전문성을 최우선 항목으로 답했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공(22.3%),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재직자 역시 전공(30.2%)이 입사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뒤이어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 뒤를 이었다. 기업과 청년 모두 ‘경험 기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응답 기업의 85.4%는 “지원자의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직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청년 재직자의 80.2% 역시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농업인-기업 기술이전 장 마련

‘미래기술 테크 매칭데이’ 개최

농협중앙회가 ‘2025 농업·AI 융합 미래기술 테크 매칭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AI)·자동화·스마트팜 기술 등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기술수요자인 농업인·기업과 연구자 간 실질적 기술이전 연계 강화도 목적이다.

행사는 기술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농업분야 AI적용 성공 사례발표 ▲유망기술 소개 ▲1:1연구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표기술로는 ▲AI모델 매니플레이터 ▲구근배양효율이 향상된 칼라식물 재분화 기술 ▲AI기반 오류 감소 협동로봇 팔 ▲스마트 적재 및 관리 시스템 ▲신속 대응형 식물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연구자와의 1:1개별상담 기회도 제공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협 투자기업인 인공지능 도축로봇 솔루션 ㈜로보스의 이두연 CEO가 참여해, AI 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농업 자동화 사례와 상용화 전략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